

#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제고 방안 논의

- 각국 전문가, 재정준칙 도입·사회보장성 기금 개혁 필요성 등 제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서울에서 9.26(화)~27(수)일 양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한-경제협력기구(OECD) 국제재정토론회(포럼)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환영사와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예산’,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구조 개편’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등 참가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악화가 되었고,

<sup>1)</sup>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가, <sup>2)</sup>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과 재해 대응 지출 증가, <sup>3)</sup>금리수준 상승에 따라 국가채무의 이자비용 부담 증가, <sup>4)</sup>지정학적 불안 지속으로 전쟁 발생·에너지 가격 상승 등 재정 대응 필요성 확대 등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재정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up>1)</sup>각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재정준칙의 도입과 활용, <sup>2)</sup>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개혁, <sup>3)</sup>장기시계의 재정전망을 활용한 재정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재정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이러한 개혁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포럼)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의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7190)
		담당자	사무관	이홍섭 (leehs86@korea.kr)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jhbae10@korea.kr)

## ① 세션 1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 ① 코로나 이후 재정정상화 : 한국의 '24년 예산안

(발제 :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 코로나 이후 한국의 재정여건 악화되었으며, 향후 도전요인으로 고령화·기후변화·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글로벌 리스크 등을 검토
- '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예산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든사업을 제로베이스 검토하고 특히 관행화된 R&D와 보조금의 누수요인을 차단하여 역대 최저지출증가율 2.8%로 편성
- 향후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sup>1)</sup>재정준칙의 도입, <sup>2)</sup>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sup>3)</sup>장기시계의 재정 전망을 활용한 재정정책 수립을 제시

### ② EU회원국 벨기에의 재정건실화 방안

(발제 : 루크 마빌레 벨기에 예산국장)

- EU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과 거시 경제에 대한 엄격한 준칙(Two-Pack, Six-Pack)을 통해 재정수지 개선
- 그러나, 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말까지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예정
- 향후 EU 국가들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연금 개혁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국민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

### ③ 일본의 재정동향 : 길고 험난한 여정

(발제 : 야스오 후지나카 일본 재무성 국장)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의료분야 등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은수준이며 향후 이자율 상승으로 누적된 국가채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는 향후 정책의 초점을 미래세대에 맞추고 이들의 소득 증대와 양육을 최대한 지원하여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② 세션 2 :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예산

### ① 한국의 녹색예산

(발제 :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 우리나라는 '30년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를 '23년도 예산부터 도입, 현재 제도도입 초기단계로 평가방법론을 정교화·체계화할 필요
- 한편,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온실가스감축 분야에 집중 지원해야 하며 기존 유류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다양한 기금재원 확보가 필요함

### ② 그리스의 녹색예산 실현을 위한 환경 구현

(발제 : 에프스타티아 츠산티 그리스 재무부 지출점토국장)

- 그리스는 재정위기 이후 공공재정관리 개혁을 통해 재정준칙 도입, 하향식(Top-down) 예산 편성, 독립적인 재정 기관의 창설 등을 추진 하였으며 이런 개혁조치가 녹색예산 편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

- 그리스는 향후 점진적으로 녹색예산 시행부처를 확대(현 2개)하고, 편성의 분야도 일반지출뿐 아니라 세입과 조세지출분야까지 포함할 예정

### ③ EU의 녹색예산

(발제 : 요그르 뵘베른되르피르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참사관)

- EU국가는 환경 친화적 분야에 정부 투자·소비를 우선 배분하기 위해 녹색예산 참조 틀(Green Budgeting Reference Framework)을 활용하여 예산 수립·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점검중
- 녹색예산의 개선을 위해 평가방법론의 고도화, 관련 전문가 육성, 정치적 의지, 전 정부에 걸친 역량 확보 등이 요구되는 상황

## ③ 세션 3 : 재정지출 성과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 ① 한국의 재정지출 개혁

(발제 : 박노옥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지출 개혁의 도전과제로 <sup>1)</sup>장기지속 가능한 국가채무 관리, <sup>2)</sup>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위험관리, <sup>3)</sup>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
-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sup>1)</sup>재정준칙의 도입, <sup>2)</sup>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건전화 병행, <sup>3)</sup>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 개혁, <sup>4)</sup>재정성과 평가시스템 강화, <sup>5)</sup>민간부분의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

### ② 영국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발제 : 콘래드 스밍 영국 재무성 국장)

-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친 영국의 재정지출 추이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시적 충격시 영국의 강력한 재정정책 대응 내용을 설명

- 향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고조, 국고채 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우선순위 결정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
- 위험시 재정의 역할을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변화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야함을 강조

### ③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재정

(발제 :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 한국은 '19년 기준 세계적으로 저부담·저복지 국가군에 속하였으나, 초저출산의 장기화('22년 0.78명)와 고령인구 급증('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으로 복지재정 소요 증가와 세수 감소가 예상됨
- 복지재정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함
- 또한, 복지재정은 지역의 구체적 수요에 기반하고 있어 지방 복지 기능 및 재정격차 조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

## 4 종합토론

(발제 : 윤 블론달 OECD 예산·공공지출 부장)

- ① 재정정책 환경은 <sup>1)</sup>높은수준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sup>2)</sup>증가하는 정부지출 요구, <sup>3)</sup>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sup>4)</sup>재정개혁에 대한 대중의 지지 부족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
- ② OECD에서 정부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sup>1)</sup>건강관련 분야 +4.7%p, <sup>2)</sup>노령 연금 분야 +1.2p%, <sup>3)</sup>국방 분야 2%p(NATO 국가) 증가가 예상되며 기후변화와 채무이자비용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예정
- ③ 향후 재정의 지속 확보를 위해 <sup>1)</sup>수입기반 확대, <sup>2)</sup>지출구조조정, <sup>3)</sup>예산기구 역량 강화, <sup>4)</sup>재정개혁을 위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